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639-651
<https://doi.org/10.29212/mh.2026..140.6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한국사에서의 ‘만주사변’ 이해 심화를 위한 밑거름

- 김상규 저, 『만주사변과 관동군·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6) -

박우현 | 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한국사에서 ‘만주사변’이라는 사건의 중요성

한국사의 영역에서 세계대공황, 만주사변, 영국의 금본위제 이탈, 제1차 상하이 사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1930년 전후의 시기는 그 세계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1930년대 전반기를 1920년대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와 구분되는 하나의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¹⁾ 물론 학계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

1) 지수걸, 「서설 : 1930년대의 사회와 운동」,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11~12쪽; 지수걸·강창일·정태현·정재정·박찬승·이승렬, 「기획 : 식민지 조선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 식민지 사회론의 제문제」, 『역사와 현실』 12, 1994, 77~83쪽.

를 하나의 독립적인 시기로 구분하는 시기구분법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교과서는 무단통치, ‘문화통치’, 총동원체제(혹은 민족말살통치)의 3시기 구분법이 익숙하고, 개설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굵직한 사건들의 연쇄가 이어졌던 1930년 전후는 일제 시기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군사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역사적 변화의 기점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세계대공황은 식민지배의 존속 가능성 자체를 흔드는 농가경제 파탄과 소작쟁의 격증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있었고, 민족해방운동에도 영향을 끼쳤기에 일정 부분 연구가 진행되었다.²⁾

하지만 만주사변은 한국사 영역 밖의 일로 치부되어 왔다. 일본군이 주도한 도발이자, 일본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민지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변화를 제국주의 국가의 상황과 분리해 볼 수 없듯이, 만주사변이 야기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도 식민지였던 조선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단적인 예로 만주사변이 촉발시킨 정치군사적 불안은 일본의 재정정책에 악영향을 끼쳤고, 자연스레 일본의 내각 교체에 따른 재정정책 변화 그리고 조선총독부 재정정책에 전면적 전환을 강제

2) 세계대공황 전후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 전환에 관해서는 정태현, 「1930년대 식민지 농업정책의 성격전환에 관한 연구」, 『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鄭文鍾, 「1930年代 朝鮮에서의 農業政策에 관한 研究 - 農家經濟安定化政策을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3; 이승렬, 「1930년대 전반기 일본군부의 대륙침략관과 ‘조선공업화’ 정책」, 『國史館論叢』 67, 1996;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방기중 편, 『일제 파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해안, 2004 등 참조. 민족운동 세력의 정세인식과 대응에 관해서는 임경석, 「세계 대공황기 사회주의·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 『역사와 현실』 11, 1994; 조형열,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민족주의 계열의 농촌협동조합론 - 제기 배경과 경제적 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61, 2015; 최규진, 「‘공황기’ 반식민지인의 ‘지식계급’론」, 『인문과학』 61, 2016; 조형열, 「1930년 전후 조선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과학론’과 ‘인텔리론’ - 학술문화운동 형성 배경을 중심으로」, 『사총』 91, 2017 등 참조.

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그 변화의 영향 혹은 피해는 조선인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었다.³⁾

이처럼 만주사변이 일제시기 한국인의 삶,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정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에도 군사적 사건의 맥락과 대내외적 배경, 제국주의 국가 일본에 내재했던 원인, 관동군뿐 아니라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상황과 역할에 대해 한국사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서가 없었다는 점은 학계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사 전공자인 김상규가 저술한 『만주사변과 관동군·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은 제국주의 국가 일본에 내재했던 대외침략의 전조부터 만주사변의 전개, 이후의 상황까지 조선에 주둔했던 조선 주둔 일본군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연구서라 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풍부한 지도 등의 당대 사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생동감 있게 만주사변을 마주할 수 있는 연구서이다.

2. 『만주사변과 관동군·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1931년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 관동군과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사적 역할과 변화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 것을 이 책의 목적으로 했다. 특히 저자는 만주사변이 흔히 ‘관동군의 폭주’라고 제한해 설명하는 경향에 대해 실제로는 관동군의 단독작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특히 조선 주둔

3) 박우현, 「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 예산편성과 인프라 투자의 단기화 - 1932년 조선사업공채 발행예산을 중심으로 -」, 『한국사학보』 91, 2023, 259~267쪽.

일본군의 역할이 중요했고, 관동군과 조선 주둔 일본군의 협동작전이었다는 점을 군사사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책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1920년대 워싱턴 체제 하의 군축과 제국국방방침의 개정 과정을 개관하면서, 그 속에서 관동군과 조선군이 어떻게 상주화·정예화되어 갔는지를 다룬다. 제2장은 1931~1932년 만주사변의 전개 과정을 관동군의 침략 경로와 조선군의 독단월경·2차에 걸친 파병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제3장은 1933년 탕구협정 이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전까지 관동군·조선군의 변화와 1936년 제국국방방침 3차 개정을 다룬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1차 사료를 사용하고, 그 속에서 발굴된 다양한 지도도 시각 자료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가 소장 및 공개하고 있는 구 일본군 공문서(『육군 일반사료』의 ‘만주사변’ 항목 등)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1907·1923·1936년 세 시기 제국국방방침의 원문(부록에 전문 수록) 역시 방위연구소 자료를 통해 직접 비교·분석했다. 이 외에도 조선 주둔 일본군에 관한 방대한 2차 기록 역시 섭렵해서 전공자의 장점을 살렸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1920년대 일본군의 대외침략 준비과정(1921~1930)

만주사변 이전인 1920년대 일본군의 대외침략 준비과정을 다룬 제1장은 워싱턴 회의 이후 일본의 군비축소(1절), 제국국방방침의 제정과 1·2차 개정(2절), 군축 이후 관동군과 조선 주둔 일본군의 상황 변화(3절)를 다루고 있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제2절에서 다루는 제국국방방침의 변화이다. 1907년 제정된 제국국방방침은 러일전쟁 승리 직후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건의로 제정되었으며, 러시아를 제1의 가상적국으로 상정하고 ‘국방은 공세를 본령으로 한다’, ‘평시 25개 사단, 전시 50개 사단을 목표로 한다’는 침략적 팽창적 국방관을 명문화했다. 1918년 제1차 개정은 제1차 세계대전과 시베리아 간섭전쟁을 반영해 병력 목표를 40개 사단으로 하향 조정하는 수준의 보충적 개정이었던 반면, 1923년 제2차 개정에서는 워싱턴체제 이후 미국이 제1의 가상적국으로, 러시아는 혁명으로 약화된 2위로 밀려났다. 중국에 대해서도 ‘자원은 평시·전시를 막론하고 확실히 이용해야 한다’는 자원 확보 논리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는 종전의 군사적 ‘이익선’ 개념이 경제·자원 확보를 위한 팽창 논리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제국국방방침에 내포된 공세적·팽창적 국방관이 만주사변을 야기한 사상적·제도적 토양이었다고 해석한다. 만주사변을 단순히 1931년 당시 현지 군인들의 우발적 폭주가 아니라 1907년 이래 축적된 구조적 침략 논리의 발현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1장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본서의 주요 소재인 조선 주둔 일본군의 동향이다. 특히 제1장에서는 만주사변의 배후에 있었던 조선 주둔 일본군이 어떻게 조선에 정착해 갔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저자는 상주화 이후 조선 주둔 일본군의 병력 충원 방식과 사단대향연습으로 대표되는 훈련 측면에 주목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한반도에 별도의 징집, 소집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일본 각지의 사관구에서 병력을 차출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무단통치’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역 후 한반도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이중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군사훈련의 측면에서 보면 1925년경부터 연대, 여단 단위 훈련이 본격화되었고, 1930년 10월 제1차 사단대향연습이 실시되었

다. 제1차 사단대향연습은 제19사단(북군)과 제20사단(남군)이 대향하는 형식으로, 3만 명이 넘는 병력이 동원되고 조선인 민가가 대규모로 숙영에 강제 동원된 대형 군사·사회적 이벤트였다. 저자는 제1차 사단대향연습이 진행된 지 불과 1년 후 조선 주둔 일본군은 정부의 승인 없이 국경을 넘은 만주사변의 주역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군사훈련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제2장 일본군의 만주침략(1931~1932)

실제 일본군의 만주침략 즉, 만주사변의 전개를 다룬 제2장의 핵심은 제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독단 월경이다. 책 전체에서 가장 자세하게 서술된 부분으로 조선 주둔 일본군이 만주사변에서 수행한 역할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한다. 우선 저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개입이 우발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1929년 이래 만주 경찰을 다니던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는 조선 주둔 일본군 참모 간다 마사타네(神田正種) 중좌와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 1930년12월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가 조선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양측의 모의는 구체화되었다. 조선 주둔 일본군은 관동군의 ‘평텐 모략’과 별도로 간도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켜 독단 월경할 명분을 만들려는 독자적인 ‘간도모략’까지 구상했으나, 관동군의 계획이 예정보다 앞당겨 발동되면서 무산되었다. 9월19일 새벽 증원 요청을 받은 하야시 사령관은 혼성 제39여단을 신의주에 대기시켰고, 참모총장의 대명(大命)을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보병 부대는 국경에 묶여 있었다. 9월21일 오전, 관동군으로부터 병력 부족을 호소하는 통첩을 받자 하야시는 중앙의 재가를 기다리지 않고 독단으로 압록강 도하를 명령했다. 이것이 이른바 ‘독단 월경’ 사건이다. 이 사건은 육군 형법상 통수권 침범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였으나, 와카쓰키 내각은 이미 벌어진

사실을 추인했고, 9월22일 각의의 사후 승인과 봉칙명령으로 위법한 출병은 ‘합법화’되었다.

월경 이후 조선 주둔 일본군의 활동은 크게 두 갈래로 이어진다. 하나는 제19사단의 간도 진출 시도로, 결과적으로는 당장은 무산되었으나, 1932년 4월 룡징 일본영사관 분관 습격 사건을 계기로 간도 임시파견대가 파견되었다. 다른 하나는 정규 파병으로, 혼성 제39여단이 평톈 경비와 ‘비적’ 소탕, 관동군의 마잔산 부대 공격 지원을 맡았고, 혼성 제38여단이 진저우 점령 이후 랴오시 지역 경비와 북만주 진격을 지원했다. 저자는 이 두 부대의 이동 경로와 전투 기록을 부대사와 『조선군역사』를 근거로 표와 지도로 제시하며, 조선군의 임무가 후방 경비에 그치지 않고 실전 지원에도 투입되었음을 실증했다.

저자는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을 관동군 점령지 후방의 경비, 진저우·텐진 등 주요 작전 국면에서의 직접 지원, 간도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입이라는 세 축으로 정리한다. 두 파견 부대가 만주국 수립과 만주군 창설로 후방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든 1932년 중반 이후 순차 복귀했다는 사실은, 조선 주둔 일본군의 임무가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만주국군으로 이양되었음을 보여준다.

제3장 만주침략 후 일본군의 동향(1932~1937)

일본의 만주 침략 이후를 다루는 제3장은 만주사변 이후 관동군과 조선 주둔 일본군의 변화(1절)와 제국국방방침의 제3차 개정(2절)을 다룬다. 제국국방방침의 제정으로 시작해 3번째 개정으로 본문을 마무리하는 구도로 이해할 수 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군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군의 정치적 발언권도 급격히 강화되었다. 육군 내부의 통제파와 황도파 대립이 2·26사건으로 폭발한 뒤에도 군부대신 현역무관제가

부활해 육군의 정치 개입은 오히려 제도화되었다. 동시에 관동군은 1934년 이후 소련의 극동 군비 강화에 대응해 병력을 약 8만 명 규모로 증강했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병력 비교표에 따르면 대소련 사단 비율은 1931년 50%에서 1936년 31%로 오히려 하락했고 항공기 및 전차의 격차도 더 벌어졌다. 저자는 이러한 격차가 정신주의, 속전즉결주의, 백병주의 중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것이 1938년 장고봉 사건과 1939년 노몬한 전투에서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조선 주둔 일본군 역시 이 시기 구조적으로 강화되었다. 제19, 제20사단의 고정원 편제가 완성되어 준전시 태세가 확립되었고, 1926년 동원계획 편입 이후 대외 파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36년에는 훈춘수비대가 신설되어 만주국 영내에 있으면서도 관동군이 아닌 조선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저자는 1935년 전라북도에서 실시된 제2차 사단대향연습도 상세히 다뤘다. 이 훈련 과정에서 작성된 숙영 통계는 일본인 가구 1호당 평균 4.4명에 비해 조선인 가구는 1호당 평균 30명에 달해, 군사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식민지 민중에게 부담이 편중되었던 사실을 실증적으로 드러낸다. 아울러 1932년 만주파전 제6사단의 조선 철도 수송 사례 등을 통해 한반도가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재편되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36년 6월에는 13년 만에 제국국방방침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세 번째 개정이었다. 기존에 미국을 단독 가상적국으로 상정했던 것과 달리 미국과 소련을 동시에 제1순위 목표로 병기하고 중국 및 영국까지 상정 적국에 추가함으로써 다전선 대비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육군은 전시 50개 사단을 목표로 설정하고 만주 주둔 병력을 고정원 6개 사단으로 명문화했다. 저자는 이 3차 개정이 워싱턴체제 아래 군축의 시대를 완전히

종료시키고 본격적인 군비확장 경쟁의 문을 열었으며, 이듬해인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과 중일전쟁 발발로 직결되었다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조선군의 독단월경이 군부 스스로 천황의 통수권을 침범한 중대한 위법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무처벌·추인의 선례가 이후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본군 독주 구조의 기원이 되었으며, 조선 주둔 일본군 역시 이 시기 이후 한반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 발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갔다고 강조하며 책을 맺는다.

3.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

이 책은 평자가 보기에 향후 1930년대 전반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장점은 풍부하게 제시된 지도와 도판 자료들이다. 저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에서 확보한 일본 측 1차 사료를 통해 만주사변과 조선 주둔 일본군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와 도판 자료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꼼꼼하게 범례를 제시해 가독성을 향상시켜 준 지도들은 군사사뿐 아니라 향후 한국사에서 사회사, 경제사, 지역사 맥락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그림 1의 조선군 배치도(1921.7.31.)은 3.1운동 이후 조선 주둔 일본군의 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이해를 배가시켜 준다. 당대 지도

에 만주사변 진행 양상을 직접 편집해 수록한 그림 3의 만주사변 진행도 역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만주사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평자가 가장 주목하는 제2차 사단대항연습의 실시지역을 보여주는 그림 13과 같은 경우도 당시 철도망과 함께 실시지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수수송에 역점을 두었던 제2차 사단대항연습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 지도의 출처가 체신국이 제작한 『사단대항연습기념』이라는 점에서 이 연습이 단순히 조선 주둔 일본 군만의 훈련이 아니라 조선총독부 전체 나아가 지역민의 일상까지 침투했던 사건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도이자 자료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평자가 보기에 이 책이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만주사변을 조선 주둔 일본군을 중심에 두고 서술했다는 사실 자체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부터 명확히 만주사변이 한반도에 끼친 영향을 서술하겠다고 명시했다. 특히 만주사변을 관동군 단독의 사건이 아니라 조선 주둔 일본군의 병력과 행정이 결합된 사건으로 재구성하고, 한반도 내부의 상황과 직접 연결하는 작업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조선 주둔 일본군이 만주사변을 전후하여 어떤 상황에 봉착해 있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와 만주사변의 관계성을 정리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을 병력 증강의 빌미로 삼았다는 점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1919년 취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조선 통치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국의 위풍’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사단 증설을 요청했고,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쓰노미야 다로(宇都宮太郎)가 1919년 9월부터 조선의 병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3.1운동과 병비 증강의 연결성을 밝혀내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만주사변의 연구사에서 주연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조선 주둔 일본군의 역할을 실증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독단 월경만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조선 주둔 일본군이 만주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관동군 점령지의 후방 경비뿐 아니라 실전 지원에도 참여했음을 밝혀내며 한반도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사실상 만주침략의 전위부대의 하나로 활동했음을 분석했다. 이 역시 한국사의 영역으로 만주사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식민통치의 실상을 밝혀내는 한 방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점으로 평자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사단대향 연습에 대한 군사사적 분석을 들고 싶다. 이 책은 1930년 경성·인천·수원 일대에서 실시된 제1차 사단대향연습과 1935년 전라북도에서 실시된 제2차 사단대향연습을 각각 별도의 절에서 다루며, 병력의 이동과 훈련 경과뿐 아니라 지방 행정·재정·민간사회의 동원 기록을 함께 제시한다. 조선 사회와 군사 훈련의 접점을 포착한 것은 향후 한국사의 다양한 연구 영역 즉, 사회사, 지역사, 경제사 등의 영역에서 꾸준히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제1차 사단대향연습과 관련해서는 경성부가 정동총대(町洞總代)와 재향군인회, 청년단을 동원하여 숙사를 마련했다는 서술, 철도국이 군대 이동과 참관자 수송을 위해 임시열차를 증편했다는 서술, 약 15,000명의 병사가 경성부 내 민가에 숙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점은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단순히 군부의 정책만이 아니라 민관군으로 연결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그런 면에서 민과 군의 관계 조선총독부 혹은 경성부 등의 지방행정기구와 군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제2차 사단대항연습에 관해서는 이 훈련이 전라도 지역의 철도 국유화 및 부산항의 보조항으로 지정된 여수항 확장과 연계되어 새로운 군수수송 루트 확보라는 측면과 연결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만주사변 당시 대규모 군사수송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의 철도망을 군사적으로 재편하는 과정과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사훈련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마리로서 향후 철도 등의 경제사를 풍부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게다가 전라북도가 남긴 기록물을 통해 제2차 사단대항연습 당시 전라북도의 숙영 능력, 수용 가능인원, 경찰의 경계 임무 등이 자세하게 남겨져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 연구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공해 주고 있다. 평자는 평소에 기존의 한국사 연구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로 일제시기 조선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군부의 활동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곤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사 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만주사변은 일제시기 한반도의 역사 전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주로 배경으로 언급될 뿐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한반도 밖에서 전개된 역사이자, 한반도와 관련이 없는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인식과 한국인이 관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듯이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만주사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를 준비하거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 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단대항연습에서 확인되는 민군관계를

추후에 더 분석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제시기 연구에서 유행가처럼 언급되는 지적이 한국인이 나오지 않는 연구는 왜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평자는 평소에도 이러한 지적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일제시기를 다루는 이유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식민지민들이 부당하게 참여할 수 없었던 분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제국주의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분야이고, 그 분석에 한국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제국주의의 실상을 밝혀주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만주사변이 그동안 한국사의 주요한 연구 소재로 다뤄지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편견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적은 제쳐둘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 끼쳤던 조선 주둔 일본군의 부정적 영향력을 밝힌다는 의미에서라도 이 책이 열어젖힌 연구사의 확장에 지지를 보낸다.